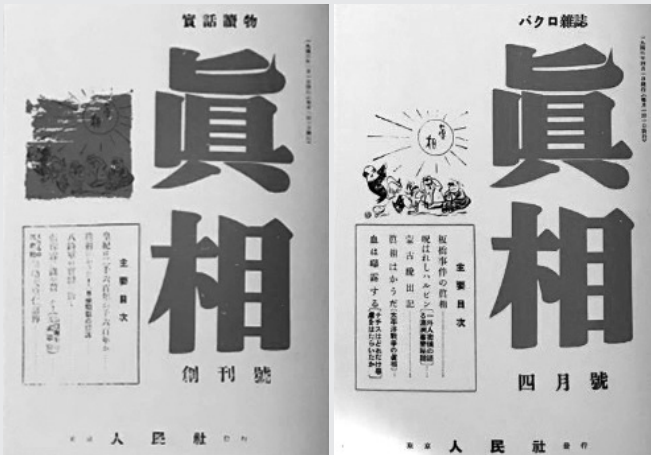


5/ 점령기 일본의 진상 폭로 미디어

미일 합작의 진실 찾기와 역사 다시 쓰기*

정지희



『真相』 창간호와 2호(人民社, 1946)

정지희(鄭知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HK). 서울대학교 동양학과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UCSD) 사학과에서 통전기(通戰期) 일본의 라디오 방송과 대중의 국민화·시민화에 관한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도쿄대학 정보학원(情報學環) 박사후 연구원을 역임했다. 전문 분야는 일본근현대사와 미디어 연구이며, 공저로 *The Affect of Difference* (Univ. of Hawai'i Press, 2016), 『響き合う東アジア史』(東京大学出版会, 2019)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The American Way of Life Rearticulated in Occupied Japan”(2018),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2016) 등이 있다.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https://doi.org/10.29154/ILBI.2020.22.140>

1. 머리말

전후 일본의 역사 인식과 자기 인식 형성에서 냉전은 중요한 매개 변수였다.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일본이라는 전후 정체성은 전시와의 선명한 단절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미국의 전후 동아시아 구상은 이와 같은 인식론상의 단절을 용이하게 한 주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 냉전의 직접적인 영향이 뚜렷해지는 것은 1947년을 즈음해 미국의 일본 점령 정책의 초점이 비군사화와 민주화에서 전후 경제 부흥으로 옮겨 가는 소위 역코스 이후의 일이긴 하다. 그러나 전후에 도래할 공산진영과의 경쟁, 혹은 전쟁에 대한 고려에서 “일본인들을 우리[미국] 체제로 끌어들이” 필요가 워싱턴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42년 무렵부터다.¹ 이런 필요에 따라 미군 점령(1945~1952) 초기 비군사화와 민주화 정책 실시 과정에서부터 소수의 군부 지도자와 일본 국민을 구분하고 전쟁의 책임은 전자에게 묻는 방식으로, 전시와의 단절을 피하고 후자를 포섭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포섭 과정에서 역사 다시 쓰기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소위 ‘태평양전쟁사관’의 성립과 대중화가 바로 그것이다.²

1 T. Fujitani, “The Reischauer Memo: Mr. Moto, Hirohito, and Japanese American Soldiers,” *Critical Asian Studies* 33(3), 2001, pp. 379~402(한국어 번역은 다카시 후지타니, 임성모 옮김, 「라이샤워의 ‘폐퇴친황제’ 구상」, 『실천문학』 61호, 2001, 360~381쪽). 인용은 p. 399. 라이샤워 메모에서 나온 어구다; Akira Iriye, *Power and Culture: The Japanese-American War, 1941-1945*,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1, pp. 58~59; John Dower, *War without Mercy: Race and Power in the Pacific War*, New York: Pantheon Books, 1986, p. 172.

2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태평양전쟁’이라는 용어 자체가 미·일 사이의 전쟁에만 집중하는 전후 역사인식의 맹점을 드러내는 역사적 개념임을 의식하되, 이런 한계를 역사화하려는 의도에서 ‘태평양전쟁사관’으로 정착된 용어를 따옴표 안에 넣어 사용하기로 했다. 이 용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지희,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 전후와 포스트 전후 일본의 ‘태평양 전쟁’사 다시 쓰기와 진실의 정치」, 『동아시아문화연구』 65집, 2016, 182쪽 각주 1에서도 밝힌 바 있다. 이 글에서는 당시 사료에서 ‘태평양전쟁’으로 지칭한 경우 그대로 표기하되, 현재 시점에서 1931년부터 1945년 사이의 전쟁을 가리킬 때에는 ‘아시아·태평양 전쟁’을 사용했다. 요시다 유타카(吉田裕)는 ‘태평양 전쟁사관’의 요점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1) 일본의 침략전쟁의 기점을 1931년의 만주사변에 두고, 만주사변-중일전쟁-태평양전쟁을 일련의 연속된 전쟁으로 취급한다. 단, 대만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통치 문제는 완전히 시야에서 제외한다. (2) 중국은 일본 침략 정책의 대상 지역으로만 그려져, 중국의 대일항전의 의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 (3) 태평양에 대해서는 미국의 거대한 전력인 일본 군국주의 타도에 가장 크게 공헌했다는 입장을 취하여, 중국 전선이나 동남아시아 각지에서 전개된 일본의 군정에 대한 저항운동은 무시한다. 미군에 협력한 버마 게릴라군이 유일한 예외다. (4) 군

‘태평양전쟁사관’은 전시와의 ‘단절’을 반긴 대다수의 일본인들 사이에서 지지를 받으며 전후 민주주의 입장에 선 역사인식의 근간을 이뤘다. 이처럼 전후 일본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은 탈식민지화보다 냉전 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미국의 동아시아 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역사관인 탓에,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한 것이기도 했다.³ 탈냉전 시대의 도래는 이러한 문제들을 현재화(顯在化)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전후의 단절사관을 상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제공했다.

그러나 이 새로운 환경이, 전후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을 미군정에 의해 ‘강요된’ ‘자학사관’으로 재규정하여 전후의 주류 역사인식으로부터 신국가주의 역사관으로의 선회를 꾀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에게 호기로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들은 소위 ‘자학사관’을 유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연합군최고사령관총사령부(General Headquarters,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이하 GHQ)가 주도한 ‘전쟁 유죄 프로그램’(War Guilt Program)⁴을 공격하며 대중 공론장에서 세를 키워 왔다.⁵

전쟁 유죄 프로그램은 1945년 9월 22일 공표된 항복 초기 미국의 대일(對日) 기본방침(SWNCC150/4)과 1945년 11월 3일 공표된 통합참모본부 초기기본지령(J.C.S. 1380/15)⁶에 따라 일본인들에게 ‘패전의 사실’을 분명히 하고 ‘전쟁의 유죄성’과 ‘군국주의자의 책임’을 인식시키기 위해 민간정보교육국(Civil Information and Education Section, 이하 CIE)이 주도하여 실행한 정보·교육 캠페인이다. 핵심이 되는 활동은 1946년 5월 3일 극동국제군사재판(소위 도쿄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의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

부를 중심으로 한 ‘군국주의자’의 전쟁책임만이 문제시되어, 천황, 궁중그룹, 재계인, 신문인 등의 ‘온건파’는 ‘군국주의자’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묘사된다. (5) 일본 국민에 관해서는 ‘군국주의자’가 국민에 대해 ‘진실’을 ‘은폐’한 것을 강조하여, ‘군국주의 지도자와 그에 속은 국민’이라는 역사 이해가 제시된다. 吉田裕, 『『太平洋戦争史観』の成立』, 『日本人の戦争観: 戦後史のなかの変容』, 岩波書店, 1995, 31~33쪽. (4)와 (5)가 이 글과 직결되는 내용이다.

- 3 ‘태평양전쟁사관’에서 제시된 ‘온건파’ 대 ‘군국주의자’라는 대립구도나, ‘군국주의 지도자와 그에 속은 국민’이라는 도식과, 연속되는 전시체제에도 불구하고 전시와의 단절을 당연시하는 ‘전후’ 인식 사이의 밀접한 관련에 관해서는 나카노 도시오, 「‘전후 일본’에 저항하는 전후사상: 그 생성과 좌절」, 권혁태·차승기 편, 『‘전후’의 탄생: 일본, 그리고 조선이라는 경계』, 그린비, 2013, 16~81쪽 참조.

례로는 CIE가 전쟁의 '진상'을 알린다는 취지에서, 1946년 12월 8일부터 일본 주요 신문에 연재했던 「태평양전쟁사」와 이 내용을 극화하여 NHK 라디오로 방송한 〈진상은 이렇다〉(真相はかうだ; Now It Can Be Told, 방송기간 1945. 12. 9.~1946. 2. 10.)를 들 수 있다.⁷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은 일본 사회의 지배적인 역사인식과 자기인식이 전후 초에 일변한 것을 전쟁 유죄 프로그램의 탓으로 돌린다. 이 프로

- 4 'War guilt'는 일본어나 한국어로 다양하게 번역될 여지가 있으며, 어떻게 번역하느냐가 미군정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와 직결되곤 한다. 예를 들어 역사수정주의 전쟁관과 점령기 미디어 이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에토 준(江藤淳)은 '전쟁의 죄악감'(戦争の罪悪感)으로 번역하고, 이 프로그램을 '일본인의 마음에 전쟁의 죄악감을 심어 넣기 위한 선전계획'으로 정의한다. 江藤淳, 『閉ざされた言語空間: 占領軍の検閲と戦後日本』, 1994, 文藝春秋, 279쪽; 그러나 가모 미치코(賀茂道子)는 『옥스퍼드 사전』(Oxford Learner's Dictionary)을 참조하여, "war guilt"가 "법적·도덕적 죄뿐 아니라 죄에 대한 의식과 죄에 대한 책임, 죄가 있다는 점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개념"임을 지적하고, GHQ 문건에 'war guilt'를 '명백하게 하다'(make clear)·'알리다'(acquaint)·'이해하게 하다'(understand)·'명심하게 하다'(impress on)와 같은 표현이 등장하는 점을 들어, '전쟁의 죄악감'이 번역어로 적절치 않음을 논과했다. 또한 "일본 지도자의 culpability와 일본국민의 war guilt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는 GHQ 문건의 표현을 들어, "죄에 대한 책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는 'culpability'에 비해 'war guilt'에 포함된 책임의 의미는 그 정도로 뚜렷하지 않다."라는 점을 밝혀냈다. 가모는 'War Guilt Program'을 일본어로 번역하기보다 영어 발음대로 가타가나(ウォー・ギルト・プログラム)로 표기하는 방식을 택한다. 賀茂道子, 『ウォー・ギルト・プログラム: GHQ情報教育政策の実像』, 法政大学出版局, 2018, 6~8쪽; 이 글에서는 가모의 연구를 참고하여 'war guilt'를 포괄적이면서도 개인 책임의 의미는 비교적 모호한 개념으로 이해하되, 침략 전쟁 자체를 유죄로 규정하는 미군정의 입장을 잘 드러내며 일본 점령기 미디어사 연구에서 통용되어 온 번역어인 '전쟁 유죄'를 택했다. '전쟁 유죄' 번역에 관해서는 有山輝雄, 『占領期メディア史研究: 自由と統制・1945年』, 柏書房, 1996, 246쪽 참조.
- 5 일일이 거론하기에는 지나치게 수가 많아 대표적인 논객들의 저서만 몇 가지 언급하면, 櫻井よしこ, 『GHQ作成の情報操作書「真相箱」の呪縛を解く: 戦後日本人の歴史観はこうして歪められた』, 小学館, 2002; 保阪正康, 『日本解体: 「真相箱」に見るアメリカ(GHQ)の洗脳工作』, 産経新聞社, 2003; 水間政憲, 『ひと目でわかる「GHQの日本人洗脳計画」の真実』, PHP研究所, 2015; 高橋史朗, 『「日本を解体する」戦争プロパガンダの現在 WGIP(ウォー・ギルト・インフォメーション・プログラム)の源流を探る』, 宝島社, 2016; 高橋史朗, 『WGIP(ウォー・ギルト・インフォメーション・プログラム)と「歴史戦」: 「日本人の道徳」を取り戻す』, モラロジー研究所, 2018; ケント・ギルバート, 『まだGHQの洗脳に縛られている日本人』, PHP研究所, 2017가 있다.
- 6 "일본국 국민의 현재와 장래의 공경을 초래하는 데 육해군지도자와 그 협력자가 담당한 역할을 철저히 알게 알리기 위해 일체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United States Initial Post-Surrender Policy for Japan"(SWNCC150/4), 6 September 1945, <https://www.ndl.go.jp/constitution/shiryo/01/022/022tx.html> (최종검색일: 2019. 10. 16.); "모든 일본인에게 패전의 사실을 분명히 한다. 그들에게 초래된 고통과 패전이 일본의 무법적이고 무책임한 침략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게 해야 한다." "Basic Initial Post Surrender Directive to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for the Occupation and Control of Japan"(J.C.S 1380/15), 3 November 1945, <https://www.ndl.go.jp/constitution/e/shiryo/01/036/036tx.html> (최종검색일: 2019. 10. 16.).
- 7 가모 미치코의 분석에 따르면 '패전의 사실'은 곧 '군사적인 완패'를, '군국주의자의 책임'은 "탄압적인 제 법령에 따라 국민을 전쟁으로 이끈 것"을, '전쟁의 유죄성'은 '침략전쟁'과 '일본인에 대한 죄'를 포함하여, 잔학행위 등 "인류 보편 이념에 비취 유죄"를 의미한다. 賀茂道子, 『ウォー・ギルト・プログラム: GHQ情報教育政策の実像』, 256~258쪽.

그램을 일방적인 ‘일본인 세뇌’ 공작이자 ‘일본 해체’ 시도였던 것으로 규정하며, 그 악영향이 여전히 ‘주술’[呪縛]처럼 일본인들의 정신을 속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역사수정주의 입장에서 선 논저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미국 중심의 해방 논리와 일본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일방적 강요론 양쪽으로부터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전쟁 유죄 캠페인의 전체상을 제공하는 실증 연구가 나오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⁸ 그러나 당시의 미디어 지형(mediascape)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미군정 대(對) 일본 미디어·오디언스’라는 이분법은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된다.

이 글은 위의 이분법이 지배하는 구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일본인 자신의 진실 찾기 붐에 주목한다. 그중에서도 특히 진상 폭로 미디어의 유행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군정이 전시에 일본인들이 군부의 거짓 전황 발표에 속았다는 대중 기만(騙された)의 수사와, 전쟁 중 은폐되었던 사실을 제공해 전쟁의 진실을 알린다는 진상 폭로 전략으로 일본인들의 역사관을 ‘교정’하고 이들을 포섭하려 한 점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본의 미디어 또한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과 별개로 진상 폭로 담론을 유포하여, 전시와 전후 사이에 인식론적인 단절을 초래하고 주도적으로 역사관을 교체하려 한 정황은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다.⁹

이 글에서는 진상 폭로 미디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인민사(人民社)의 대중잡지 『진상』(真相)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진실을 은폐한 소수의 전쟁 책임자와 기만당한 국민’이라는 전제 위에 선 전후 일본의 역사 다시 쓰기가 미군정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역동적인 미일 합작의 산물이었던 점을 보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진상』은 좌파 입장에서 일본 대중을 계몽

8 賀茂道子, 『ウォー・ギルト・プログラム: GHQ情報教育政策の実像』.

9 미군정과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유사한 진상폭로 전략과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통념을 활용한 점에 대해서는 정지희,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 전후와 포스트 전후 일본의 ‘태평양 전쟁’사 다시 쓰기와 진실의 정치」, 181~213쪽 참조.

하고 선동하려 한 점에서 미군정과 목표를 달리하면서도, 역사적 진실을 사실의 은폐와 폭로의 문제로 환원하여 일본인들이 새로운 역사관을 채택하기 쉽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위와 같은 정황을 드러내어 이 글이 목표로 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어진 냉전이라는 틀에서 한 걸음 벗어나, 각 사회, 지역(region),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각자의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이합집산하면서 주조(鑄造)해 낸 일종의 패치워크(patchwork)로서 글로벌 냉전의 역사 경험을 다시 보려는 최근의 움직임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¹⁰ 또 하나는 현재 진행형인 탈냉전기 역사수정주의 역사 서술에서 지배적인 주장, 즉 전후 지배적인 역사 인식이 미군정에 의한 일방적인 세뇌의 결과, 혹은 ‘전쟁의 죄악감’을 이식당한 ‘자학사관’이라는 주장을 상대화하는 데 일조하는 것이다.

전후 역사 인식 교체 과정에서 미군정과 일본 미디어의 진상 폭로 전략은 오히려,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단순명쾌한 설명으로 대부분의 일본인이 ‘죄악감’을 덜고, 진실의 이름으로 새로운 역사관을 수용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했다. 이 글은 단 하나의 역사적 진실에 상응하는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라는 개념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정을 조명하고 그 역사적 함의를 냉전과 탈냉전 시기 역사인식 및 역사서술 문제에 비추어 생각해 볼 것이다.

10 냉전 연구사의 새로운 흐름에 관한 개괄은 오경환, 「냉전사 연구의 궤적: 정통주의에서 담론적 전회 에 이르기까지」, 『史叢』 95호, 2018, 3쪽, 7~20쪽; 구미 중심의 냉전관을 탈구축하고 글로벌 냉전 경험의 다양한 양상과 복수의 층위를 드러낸 연구로는 권현익, 이한중 옮김, 『또 하나의 냉전: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민음사, 2013; 프랑스 근대미술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전유하여 미국을 상대화하고 ‘일본’ 미술을 재건하려 한 냉전하 일본 미술계의 움직임을 ‘또 하나의 냉전’이라는 틀로 조명한 연구로는 박소현, 「또 하나의 냉전: 미군 점령기(1945~1951) 일본에서의 ‘민주주의’적인 프랑스 미술의 궤적」, 『현대미술사연구』 19집, 2006; 다양한 주체들이 초국가적으로 형성한 담론적 구축물로서의 냉전을 조명한 연구로는 Masuda Hajimu, *Cold War Crucible: The Korean Conflict and the Postwar Worl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5.

2. 점령기 폭로 잡지 『진상』

『진상』은 인민사가 대중 독자를 염두에 두고 1946년 3월 1일 창간한 월간지다. 인민사는 전전 좌익 출판운동이나 사회운동 경력으로 치안유지법에 저촉되어 투옥되었다가 ‘전향’한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후 좌익 재건과 통일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세운 출판사다. 인민사의 주축은 공산당의 권유로 비밀당원으로 활동하면서도, 도쿠다 규이치(徳田球一, 1894~1953)·시가 요시오(志賀義雄, 1901~1989)를 필두로 하는 전후 공산당 주류파의 천황제 타도 주장이나 극좌주의에는 거리를 두는 인물들이었다. 이들은 오히려 노사카 산조(野坂参三, 1892~1993) 계열의 대중에게 ‘사랑받는 공산당’·통일전선·점령하의 ‘평화혁명’ 노선에 공감하는 입장이었다. 『진상』은 1950년 일본공산당 분열에서 기인한 내분으로 1951년 1월(56호)을 기하여 일시 휴간되었다가, 점령 종료 후인 1953년 11월에 복간되어 1957년 3월호인 108호까지 출간되었다. 흔히 복간을 전후하여 1기와 2기로 구분한다.¹¹

『진상』은 사실에 입각한 폭로로 대중을 계몽한다는 목표를 뚜렷이 내세웠으며, 이와 같은 지향은 표제어에도 잘 드러난다. 창간호의 표제어는 ‘실화 읽을거리’(実話読物)였고, 이후에 ‘폭로 잡지’·‘민중의 잡지’·‘늘 진실만을 말한다’ 등이 차례로 쓰였다. 기고·수기·읽을거리·사진·만화·삽화 등으로 구성된 B5 국판 잡지로, 주제별 특집을 중심으로 하는 특별판도 간행했다. 인민사의 주역들 이외에도 저명한 역사가나 변호사 등이 필자로 참여했고, 아사히·마이니치·요미우리 신문 기자나 저널리스트가 익명으로 기고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¹² 역대 천황가 추문을 들춰내 천황제 신화를 상대화하는 기사들이 인구에 회자되며 초창기 발매부수 상승을 견인했고,¹³

11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法政大学大原社会問題研究所 編, 『証言占領期の左翼メディア』, 御茶の水書房, 2005, 269~302쪽을 참조하여 정리했다. 1988년 11월 30일과 1989년 7월 30일 두 차례에 걸친 증언을 정리한 내용이다.

12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296쪽.

13 佐和慶太郎, 「『真相』の売れる真相」, 『潮流』 4卷 9号, 1949, 48~49쪽.

군부와 정치인들의 전쟁 책임 추궁과 정관계 비리 폭로 및 가십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진상』은 점령기에 정치적 입장을 막론하고 속속 출간되었던 진상 폭로 잡지의 원형을 제공했다. 가십과 고발을 겸하는 『진상』의 형식은 나중에 정치권력과 권위에 맞서는 스캔들 폭로(スキャンダルリズム)를 표방한 월간지 『소문의 진상』[噂の真相, 주식회사 소문의 진상(株式会社噂の真相) 간행, 1979~2004]에도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필자가 『진상』에 주목하는 이유는 우선 사실에 바탕을 둔 실화 보도와 진상 폭로 전략을 내세워, 전후 초에 적극적으로 역사관을 교체하려 시도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점차 정관계 비리 고발과 가십, 사회당과 공산당 지도부의 내막, 쇼와 천황 가십, 중국내전이나 한국전쟁 보도 등, 전후 진행형의 문제로 초점이 옮겨 가나, 점령 초기에는 주로 천황제 비판과 전시 군부와 정치인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 글이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로 점령 초기에 주를 이뤘던 내용이다.

두 번째 이유는, 『진상』이 당시 대중 사이에 많이 회자되고 영향력이 컸던 매체이기 때문이다. 『진상』은 『인민』과 같이 인민사가 발행한 여타 잡지는 물론이고, 『아카하타』(アカハタ), 『전위』와 같은 공산당의 정식 기관지보다도 훨씬 대중에게 인기와 인지도가 높았다.¹⁴ 한때 『세계』(世界), 『중앙공론』(中央公論), 『개조』(改造)보다 발매부수가 많을 정도로 대중적인 영향력이 상당했다. 약 2만 부 정도 인쇄했던 창간호부터 매진을 기록하고 매호 발매수가 늘어, 1948년 당시 최대발매부수가 약 12만 부에 달할 정도였다. 주요 구독자는 샐러리맨 계층으로 알려져 있다.¹⁵

점령기 일본 미디어 지형에서의 존재감이나 당대 혹은 후대 미디어에 미친 영향에 비해, 『진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루는 점령기 역사관의 갑작스런 교체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하다. 『진

14 佐和慶太郎, 「人民社と『真相』のころ: 左翼ジャーナリズムの発足」, 『現代の理論』 83号, 1970, 35쪽.

15 佐和慶太郎·松浦総三, 「『真相』の周辺」, 『現代の眼』 18卷 3号, 1977, 136쪽;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295쪽.

상』을 다룬 글로는 당시 편집자를 지낸 사와 게이타로(佐和慶太郎, 1910~)¹⁶ 등 관련자의 회고·증언·인터뷰가 대부분이고,¹⁷ 『문예춘추』(文藝春秋) 편집자 출신인 가네코 가쓰아키(金子勝昭)의 천황제 관련 비평¹⁸과 백과사전식 잡지 소개¹⁹가 소수 나와 있다. 학술 연구는 다른 점령기 시국잡지의 비교 대상으로 거론된 경우를 제외하면,²⁰ 검열 사례가 다뤄진 정도다.²¹ 이상의 글과 논저는 『진상』을 어김없이 미군정과 일본 보수정권의 대극(對極)에 배치하며, 이들 냉전 권력의 억압과 검열에 맞선 ‘좌익 저널리즘’·‘좌익 시국잡지’로 자리매김한다.

물론 『진상』이 공산주의 노선의 폭로(exposure) 잡지로 분류되어 미군정의 엄격한 검열 아래 놓였던 것은 맞다. 『진상』은 1947년 10월에 민간검열시대(民間検閲支隊, Civil Censorship Detachment, 이하 CCD)²²의 검열 원칙이 사전에서 사후로 전환된 이후에도 여전히 사전 검열 처분을 받은 28개 잡지 중 하나였다.²³ 가토 데쓰로(加藤哲郎)는 프랑게 문고(Gordon W. Prange Collection)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진상』이 검열된 사례를 집계했는데, 그에 따르면, 1946년 3월부터 1949년 10월에 CCD 검열이 폐지되기까지 표지, 목차, 광고, 표제를 포함한 1,680건 중 242건이 공표 금지(suppress)와 일부 삭제(delete)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전체 게재 건수 가운데 약 15%에 달

- 16 도쿄출생. 신문기자를 거쳐 『노동잡지(労働雑誌)』 편집자 역임. 1937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검거. 1945년 인민사 설립. 『진상』 창간호부터 편집자 역임.
- 17 佐和慶太郎, 『『真相』の売れる真相』, 47~50쪽; 佐和慶太郎, 「人民社と『真相』のころ: 左翼ジャーナリズムの發足」, 29~41쪽; 佐和慶太郎·松浦総三, 『『真相』の周辺』, 130~145쪽;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253~302쪽.
- 18 金子勝昭, 「天皇制とバクロ雑誌: 『真相』, 『思想の科学』 第6次 通号 98, 1978, 67~72쪽.
- 19 塩澤實信, 『戦後出版史: 昭和の雑誌・作家・編集者』, 論創社, 2010, 33~37쪽.
- 20 加藤哲郎, 「戦後時局雑誌の興亡 1946~57: 『政界ジープ』vs. 『真相』」, 20世紀メディア研究所 第113回研究会, 2017. 7. 29., 발표문 1~18쪽.
- 21 原田健司, 「雑誌『真相』検閲の事例紹介」, 『Intelligence』 12号, 2012, 137~145쪽.
- 22 최근 들어 논저에 따라 민간검열국(民間検閲局)으로 번역하기도 하나, 민간검열지대가 더 일반적인 것으로 사용되므로 이 글에서는 후자를 사용한다.
- 23 이들 ‘요주의’ 잡지 중 『진상』을 포함하여 『세계』(世界), 『중앙공론』(中央公論), 『개조』(改造), 조선문화연합(朝鮮文化連合)의 『민주조선』(民主朝鮮) 등 26개가 ‘좌익 이데올로기’ 잡지로 분류되었다. 山本武利, 『占領期メディア分析』, 法政大学出版局, 1996, 304~305쪽.

한다.²⁴ 프랑게 문고 소장의 검열원고 400매를 직접 분석한 하라다 겐지(原田健司)는 『진상』 7호까지 65개, 특집판 7호까지 19개 기사가 공표금지나 일부삭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다.²⁵ 실제로 사와 게이타로는 점령이 끝난 후 복간된 『진상』의 첫 호인 통권 57호부터 12회에 걸쳐, 미군정 당시 검열 경험을 회고하는 『『진상』 협역사(銑厄史)』라는 제목의 연재 기사를 게재해, ‘GHQ의 언론 탄압’을 폭로했다.²⁶ 이런 사정에 초점을 맞추면, 점령기 『진상』은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에토 준과 탈냉전기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유포해 온 ‘닫힌 언어 공간’으로서의 점령기 미디어 이미지를 강화하는 사례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러나 GHQ에 의한 좌익 미디어 탄압이라는 단순한 틀에서는 전전부터 전후로 이어진 미디어 검열의 연속성은 물론이거니와,²⁷ 더욱 중요하게는 『진상』을 둘러싼 점령 초기의 중요한 역사적 정황이 사각 지대에 놓이고 만다. 점령 초기 미군정에 의한 전쟁 유죄 프로그램이 한창 진행될 당시 『진상』 또한 아시아·태평양전쟁사의 진상을 폭로하는 담론을 대중적으로 유포하면서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과 보조를 맞춰 전후 진상 폭로 붐에 동참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런 정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3. 『진상』과 전쟁 유죄 프로그램: 전유와 합작의 역사 다시 쓰기

진상이 창간된 1946년 3월은 미군정이 전쟁 유죄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24 加藤哲郎, 「戦後時局雑誌の興亡 1946~57: 『政界ジープ』vs. 『真相』」, 3쪽; 검열의 구체적인 사례에 관해서는 原田健司, 「雑誌『真相』検閲の事例紹介」 참조.

25 原田健司, 「雑誌『真相』検閲の事例紹介」, 144~145쪽. 건수에서 가토의 통계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라다의 경우 제목이 있는 기사만 집계했기 때문이다.

26 인용 어구는, 『『真相』銑厄史(1)』, 『真相』 57호, 1953, 28쪽. 글 제목의 ‘가위’(銑)는 검열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이후의 증언에서도 ‘언론 탄압’은 자주 언급된다.

27 통전기[通戦期, 혹은 관전기(貫戦期); transwar] 일본정부와 GHQ에 의한 일본 미디어 검열의 연속성에 관해서는 Jonathan E. Abel, *Redacted: The Archives of Censorship in Transwar Japan*, Berk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실시하고 선전하던 시기에 해당한다. 『태평양전쟁사』의 신문 연재와 〈진상은 이렇다〉의 방송을 완료하고, 그 속편인 〈진상 상자〉(真相箱, Truth Box, 1946. 2. 17.~1946. 11. 29.)와 같은 라디오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가고 있었다. 미군정이 전쟁 유죄 프로그램에 ‘진상’이라는 용어를 빈번히 사용했고, 전제나 전략에서 유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진상』의 창간 또한 이 프로그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창간 당시 정황을 설명하는 증언과 회고로 미루어 볼 때, 『진상』은 미군정이 주도한 전쟁 유죄 프로그램의 단순한 파생물이라기보다는 일본인 자신의 진실 찾기 욕망에 소구하여 대중을 ‘선동’하고 역사를 다시 쓰려는 의도에서 기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우선 ‘진상’이라는 제명이나 진상 폭로라는 잡지의 기초가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사후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사와 게이타로의 증언에 따르면, 『진상』이라는 이름의 신간 잡지를 구상한 것은 종전 직후인 1945년 10월의 일이다.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이 대중 앞에 선보이기 시작한 1945년 12월보다 잡지 제목으로 ‘진상’을 떠올린 것이 시기에서 오히려 앞선다. 사와는 “이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알리는 것이 대중을 계몽하는 데 필요”하다는 지론을 갖고 있었는데, 공습으로 불탄 흔적이 남아 암울한 고엔지(高円寺)의 거리를 거닐다가 ‘계급적인 실화 잡지’라는 구상이 문득 뇌리를 스쳤고, 거의 반사적으로 ‘진상’이라는 제명이 떠올랐던 것으로 회고한다. 동료들 중 일부가 전쟁기 베스트셀러였던 신흥종교 ‘세이초노이에’(生長の家) 계열의 연작 『생명의 실상』[生命の実相, 다니구치 마사하루(谷口雅春) 지음]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는 것을 보더라도, 인민사에 모인 지식인들이 ‘진상’ 개념과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을 바로 연결시킨 것은 아니었다.²⁸

오히려 『진상』이 당시에 널리 퍼져 있던 전쟁의 실상에 대한 관심에 편

28 佐和慶太郎, 「『真相』の売れる真相」, 47쪽; 佐和慶太郎, 「人民社と『真相』のころ: 左翼ジャーナリズムの発足」, 35쪽.

승하여, 일본 미디어와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으로 조성된 진상 폭로 붐을 적극적으로 확대 재생산한 것으로 보는 편이 적절할 것이다. 패전의 원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은 이미 고조되어 있었다. 그 단적인 예로 1945년 11월에 이미 마이니치신문 기자 모리 쇼조(森正蔵, 1900~1953)가 쓴 『선풍 20년』(旋風二十年)의 초판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오른 것을 들 수 있다. 전쟁의 ‘이면’을 다룬 것으로 대대적으로 선전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결과였다.²⁹ 『진상』의 창간은 물론이고 「태평양전쟁사」의 개시보다도 앞선 시점의 일이다. 당시에 사와는 몇몇 동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감적으로 이견[‘진상’이라는 제명]을 통할 거라 생각했다.”라고 회고하는데, 이런 그의 판단은 위와 같은 당시의 사회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심지어 그는 “우물쭈물하다가는 이 제명을 다른 이에게 뺏길까 하는 불안이 앞서,” 『진상』이라는 제명을 선점할 목적으로 그 당시 광고료가 가장 컸던 『도쿄신문』에 광고부터 내기도 했다.³⁰ 사와의 예상은 둘 다 맞아떨어졌다. 『진상』의 창간호는 매진될 정도로 즉각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후 ‘진상’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제명을 달거나 진상 폭로를 표방하는 잡지와 신문이 우후죽순 격으로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을 폭로하여 진실을 밝힌다는 『진상』의 기조 또한 미군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글로벌 좌파의 대중 선동 전통에서 미디어를 활용한 진상 폭로 개념을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잡지 『현대의 이론』(現代の理論) 편집부는 사와를 인터뷰하면서, 『진상』이 표방하는 ‘폭로’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폭로하여 선동한다”는 의미의 당파적인 용어’인지 물었다. 사와는 미타무라 시로(三田村四郎, 1896~1964)가 1928년에 월간지 『마르크스주의』에 발표한 「선동과 선전」이라는 글에서 실

29 森正蔵, 『旋風二十年: 解禁昭和裏面史』, 鱗書房, 1945; 초판 출간 당시 이 책이 불러일으킨 반향에 관해서는 塩澤実信, 『戦後出版史: 昭和の雑誌・作家・編集者』, 297~298쪽; John Dower,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1999, pp. 490~492.

30 佐和慶太郎・松浦総三, 「『真相』の周辺」, 133쪽.

마리를 얻었음을 밝혀, 긍정의 뜻을 표했다.³¹

그 논문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을 정도로 나에게 통렬한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 [미타무라]는, 선동이란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라! 고 감탄부호를 붙여 절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실을 무수히 전달하는 것이다. 쌀소동이 그렇게 전국적인 규모의 봉기[一揆]로까지 발전한 것은, 부르주아 신문이 사건을 하나하나 극명하게 보도한 것이 쌀값 상승에 불만을 갖고 있던 전국의 빈민을 선동하여, 쫓기 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논했습니다만, 나는 잡지를 편집하는 마음가짐으로 이것을 명심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진상』을 ‘폭로 잡지’라고 스스로 칭한 데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입니다.³²

미타무라 시로의 논문은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참고하여 위에서 사와가 소개한 선동 개념을 설명한 것이었다. 특히 선전은 선봉에 선 소수의 지식인을 대상으로 무수한 사상을 활용해 사회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선동은 잘 알려진 사실을 동원해 대중의 격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구분했다.³³ 국경을 넘어 좌파 계열에서 대중 선동과 진상 폭로를 연결시키는 오랜 사고방식은 전전 독일 사회민주당의 대중잡지 『진상』을 분석한 사토 다쿠미(佐藤卓己)의 연구에서도 엿볼 수 있다.³⁴ 즉, 대중을 선동하는 수단으로 진상 폭로를 선택한 『진상』의 전략과, 전시에 은폐되었던 패전의 실체를 알려 일본인의 역사관을 바꾼다는 미군정의 기획이 맞아떨어진 것이다.

31 野村襄二, 「扇動とは何ぞや」, 小泉保太郎, 『左翼労働組合運動』, マルクス書房, 1929, 77~91쪽에 재록된 것으로 보인다. 이 글 1장의 제목이 「선동과 선전」이다. 91쪽에는 이 글의 최초 발표일이 1928년으로 기재되어 있다. 고이즈미 야스타로(小泉保太郎)·노무라 조지(野村襄二)는 모두 미타무라의 필명이다.

32 佐和慶太郎, 「人民社と『真相』のころ: 左翼ジャーナリズムの発足」, 36~37쪽. 유사한 증언은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294쪽 참조. 다만, 1947년에 사와가 발표한 글에서는 “폭로잡지라는 독특한 틀은 당시 편집장을 맡고 있던 요시다 히로시(吉田弘)가 붙인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佐和慶太郎, 「『真相』の売れる真相」, 47쪽.

33 野村襄二, 「扇動とは何ぞや」, 77~80쪽.

34 佐藤卓己, 「『宣伝政党』ドイツ社会民主党と風刺漫画雑誌『真相』」, 『史林』70卷1号, 1987, 73~117쪽.

『진상』의 「창간사」는 독자들에게 잡지의 지향과 진상 폭로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위정자는] 인민을 [시정방침에] 따르게 하면 되지, [따라야 하는 이유를]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 이것은 봉건 대(大)정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의 위정훈(為政訓)이다. 메이지 이래 천황 정부도 그 개업 인사에는 5개조의 서문(五箇条の御誓文)이라는 훌륭한 각 항목을 열거하여, 어떻게든 민주주의에 철저한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그 후 팔십 년 동안, 작년 여름의 무조건 항복의 순간까지 이에야스의 정치훈을 고수하여 인민을 바보 취급해 온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지금 우리나라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시점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봉건 정치사상으로부터 인민을 해방하는 것이다. 태어나 처음으로 귀마개를 빼게 된(抜かれた) 국민에게, 눈가리개를 벗게 된(外された) 국민에게,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짓(でたらめ)을 폭로하여 온전한 진실을 전할 때, 칠천만 동포는 비로소 만주사변 이래의 전쟁이 과연 성전이었는지, 천황 정부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민에게 올바른 비판·내일의 틀림없는 건설을 바랄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이론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실에 의해, 천황제·자본주의 기구를 철저히 해부하여, 인민 계급의 민주주의 교육에 일조하려는 것이다. 절대적인 지원을 바란다.³⁵

사실 폭로로 전후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전략과 논리는 미군정이 주도한 전쟁 유죄 캠페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의미 있는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진상』의 경우 사실을 은폐한 주체이자 전쟁 책임을 추궁

35 「創刊のことば」, 『真相』 創刊号, 1946, 3쪽. 강조는 인용자. 『논어』(論語) 「태백편」(泰伯編)의 “民は由らしむべし, 知らしむべからず”를 인용한 것이다. 본래 “인민은 따르게 할 수는 있으나, 왜 따라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뜻이나, 에도 시대에 위정자가 시정 방침을 정한 이유를 인민에게 알릴 필요는 없고 일방적으로 따르게 하면 된다는 의미로 와전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상』 창간사에는 에도 시대에 일반화된 뜻을 더 분명히 하려는 의도인지, ‘由’ 대신 ‘寄’를 써, “民は寄らしむべし”로 적고 있다.

할 대상으로, 군부뿐 아니라, 천황·관료·자본가·지주를 포함한 점을 들 수 있다. 『진상』 1권 4호에 실린 「진상의 사명에 관하여」라는 글은 이들을 ‘일본의 침략 전쟁을 지지하고 협력한 일체의 파쇼’로 지칭하여, 소위 ‘지배 계급’ 전체에 책임을 돌리는 입장을 선명히 드러냈다.³⁶ 천황의 전쟁 책임 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한 것은 특히 미군정의 접근과 다른 점이었다. 두 번째 차이는 이와 같은 ‘지배 계급’이 사실을 은폐했던 것은 전시뿐 아니라 패전 이전의 시기 전체였다고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황제와 자본주의를 비판의 표적으로 명시한 점이다.

위와 같은 상이점은 공산당이 지난 전쟁의 성격을 미군정과는 다르게 규정했고, 궁극의 목표가 달랐던 점을 환기한다. 미군정이 전쟁을 자유주의와 파시즘 사이의 대결로 보고 전자의 승리를 자찬하는 데 역점을 둔 것과 달리, 일본의 좌파는 같은 전쟁을 자본주의 제국 사이의 쟁투로 이해하고, 자본주의 체제의 극복을 지향했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진상』 편집진은 일단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을 전유하여 진상 폭로 붐을 확대하고, 이러한 상황을 그들 나름의 역사 다시 쓰기에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점은 우선 〈진상은 이렇다〉와 〈진상 상자〉의 방송 원고에 지면을 할애한 사실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진상』은 창간호와 2호에 〈진상은 이렇다〉의 방송 원고를 연달아 2회, 6호에 〈진상 상자〉의 원고를 1회 게재했다.³⁸ 〈진상 상자〉의 일본어 원고는 방송 종료 후 미군정이 책자 형태로 묶어 출판한 것이 남아 있다.³⁹ 하지만 〈진상은 이렇다〉와 〈진상 상자〉의 일본어 원고가 활자 형태로, 그것도 『진상』과 같은 좌익 대중잡지의 지면을 빌려 유통된

36 『『真相』の使命について』, 『真相』 1卷 4号, 1946, 4쪽.

37 Sebastian Conrad, *The Quest for the Lost Nation: Writing History in Germany and Japan in the American Centu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0, pp. 108~109.

38 「真相はかうだ! 太平洋戦争開戦の真相」, 『真相』 創刊号, 1946, 8~11쪽; 「真相はかうだ: カダルカナールからラバウルまで(太平洋戦争の真相)」, 『真相』 2号, 22~26쪽; 「真相箱」, 『真相』 1卷 6号, 23쪽.

39 連合軍總司令部民間情報教育局 編, 『真相はかうだ: ラジオ放送「真相箱」の再録』 第1輯, 聯合プレス社, 1946; 連合軍總司令部民間情報教育局 編, 『真相箱: 太平洋戦争の政治・外交・陸海空戦の真相』, コズモ出版社, 1946.

사실은 선행연구에서도 다뤄진 적이 없는 새로운 발견으로, 주목을 요한다. 『진상』은 이들 프로그램의 원고를 게재했을 뿐 아니라,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총 20쪽 분량의 창간호에서 4쪽, 즉 20%의 분량을 〈진상은 이렇다〉에 쓴 것이다. 〈진상은 이렇다〉의 원고는, 용지 할당제가 실시되던 당시 종이 부족으로 연재 기사인 「읽을거리 천황기」마저 휴재(休載)했던 2호에도⁴⁰ 5쪽에 걸쳐 실렸다.

미군정이 주도한 전쟁 유죄 프로그램의 방송 원고를 게재한 이유에 대해 『진상』에서는 아래와 같이, 『진상』 측에서 요청하여 미군정의 허가를 얻어 게재한 것으로 적고 있다.

이 기사는 일본 국민에게 태평양전쟁의 진상을 이해하기 쉽게 알리기 위해 작년 12월 8일 연합군사령부가 발표한 「태평양전쟁사」를 원작으로 편집되어, 매주 라디오로 연속 방송되고 있는 〈진상은 이렇다!〉의 일부분이다. 본지의 게재는 연합군사령부 라디오반(班)의 호의로 특별히 허가된 것으로, 이 점 깊이 감사한다. 편집부는 읽어서 이해하는 [태 중점을 둔다는] 방침[立前]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대본에서 임의로 삭제했다.⁴¹

실제로는 『진상』 편집부의 의향과 무관하게 전쟁 유죄 프로그램을 선전하려는 GHQ의 지령에 따라 게재했을 가능성도 물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태평양전쟁사」의 경우 미군정이 각 신문에 게재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명시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 점은 분명하다. 『아사히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모두 1945년 12월 8일부터 게재하

40 佐和慶太郎, 「『真相』の売れる真相」, 48쪽.

41 「真相はかうだ!：太平洋戦争開戦の真相」, 8쪽. 방송 대본에서 임의로 삭제한 부분이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원고 원본이나 녹음된 방송본과 면밀히 대조한 후에 정확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점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프랑게 문고 소장의 창간호 검열 원고와 검열 사항을 살펴보다도, 최소한 검열 과정에서 미군정이 『진상』 편집부가 임의로 삭제한 내용을 문제 삼은 일은 없었다는 점이다. 『真相』創刊号, 1946, 프랑게 문고 소장 교정쇄와 교정쇄에 첨부된 CCD 검열문서, 일본 국회도서관 헌정연구실 소장 사본 사용.

기 시작한 「태평양전쟁사」 연재 기사 바로 앞에 “이런 관점에서 미군사령 부당국은 일본과 일본국민을 지금의 운명으로 이끈 사건을 다룬 특별 기사를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⁴² 한편 CIE 라디오반(Radio Unit)의 주간 보고에서 〈진상은 이렇다〉와 〈진상 상자〉의 방송 원고를 게재하도록 『진상』에 직접 지시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⁴³

『진상』에서 밝힌 대로, 『진상』 편집진 측에서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면, 이 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아래와 같은 사와 게이타로의 사후 증언은 『진상』 편집진이 미군정의 민주화 정책에 공감하고 사실 폭로를 수단으로 하여 이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던 것으로 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맥아더 사령부는 당초 민주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진상』 편집진은] 그 민주화를 철저하게 해, 일본에 뿌리 내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권력에 의해 은폐되어 온 역사적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해, 그것으로 국민을 계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요컨대 천황제와 일본의 자본주의의 실태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널리 폭로해, 그 광범한 계몽활동을 통해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실현하려는 건지였습니다.⁴⁴

잘 알려진 것처럼, 미군정과 공산당은 1946년까지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점령 초기에 공산당은 미군정을 ‘해방군’으로 인정하고 지지를 표명했다. 미군정의 소위 ‘인권지령’⁴⁵에 따라 치안유지법과 사상범보호관찰법이 폐지되면서 도쿠다 규이치나 시가 요시오와 같이 전쟁 중에 전향을 거부하여 장기 투옥 중이던 간부들이 풀려났고,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42 「太平洋戦争史真実なき軍国日本の崩潰」, 『朝日新聞』, 1945. 12. 8., 3쪽; 「連合軍の記述せる太平洋戦争史: 隠蔽されし真実」, 『読売新聞』 1945. 12. 8., 2쪽. 두 신문에 실린 문구는 정확히 일치한다.

43 “Weekly Report of Radio Unit, Information Division, CI&E: Jan. 1946~Dec. 1946,” Folder 16, Box 5319, RG 331, The National Archives at College Park, Maryland.

44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294쪽.

45 1945년 10월 4일 GHQ가 일본정부에 내린 지령인 「정치적·시민적·종교적 자유에 대한 제한의 철폐에 관한 각서(Removal of Restrictions on Political, Civil, and Religious Liberties)」(SCAPIN93).

활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욱 중요한 역사적 정황은 바로 일본 공산당이 일본의 군국주의자와 봉건 잔재를 일소하려는 목표를 미군정과 공유했던 점일 것이다.⁴⁶ 공산당과 미군정은 모두 패전의 원인을 일국사적인 사회 발전의 경로에서 찾았고, 미군정의 일본의 발전 정도와 성격에 대한 인식은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강좌파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미군정의 민주화 개혁은 강좌파 역사 해석의 공신력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했다.⁴⁷ 한편, 공산당은 강좌파의 역사 해석에 기초하여, 사회주의 혁명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선 시민혁명을 달성한다는 ‘2단계 혁명론’을 주창했다. 천황제와 같은 ‘봉건 잔재’의 권위를 해체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1단계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미군정의 민주화 정책은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었다.⁴⁸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에 비춰 보면 『진상』 편집진이 점령 초기에 GHQ가 주도한 전쟁 유죄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게다가 『진상』과 인민사를 주도한 이들은 점령하의 ‘평화혁명’ 노선을 따르는 인물들이었다. 『진상』 편집진은 『진상』이 창간되었던 1946년을 ‘평화혁명 도상’에 있었던 해로 회고하기도 했다.⁴⁹

더구나 위에서 소개한 사와의 증언이, 이후 점령 당국과 공산당 사이의 밀월 관계가 종언을 고하고 소위 역코스 이후 미군정의 좌익에 대한 탄압을 목도한 후이자, 점령이 끝난 지 오래인 1970년대에 이루어진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즉, 이후 역사의 전개와 상관없이, 『진상』 편집진이 미군정의 민주화 정책 아래 시도된 역사 다시 쓰기와 본인들의 사명을 연속적인 것으

46 山本武利, 『占領期メディア分析』, 385~386쪽.

47 이 점에 대해서는 나가하라 게이지,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삼천리, 2011, 165~167쪽을 참조했다.

48 Sebastian Conrad, *The Quest for the Lost Nation: Writing History in Germany and Japan in the American Century*, pp. 108~110; 오구마 에이지, 조성은 옮김, 『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 돌베개, 2019, 155~156쪽.

49 『編集後記』, 『真相』2卷 7号, 1947, 35쪽.

로 보았던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상』 창간 초기 지면 구성 자체에서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진상을 폭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진상은 이렇다>와 <진상 상자>의 원고는 이러한 『진상』의 편집 방침에 잘 맞고, 다른 기사와 동반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사였던 것이다. 예를 들어 창간호에 실린 <진상은 이렇다>의 원고는 「장작림은 누가 죽였는가?(만주사변의 이면을 말한다)」, 「마닐라의 약탈」과 같이, 『진상』 편집진이나 외부 필자가 쓴 다른 전쟁 진상 폭로 기사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며,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진상』 편집진이 위와 같이 미군정의 역사 다시 쓰기 프로젝트와 공조해 전시 일본 지도층의 전쟁 책임을 추궁하는 한편, 『진상』 나름의 ‘당파적인’ 역사 다시 쓰기도 함께 시도했다는 점이다. 이 점은 창간호에서부터 분명히 드러났다. 창간호는 전쟁 진상 폭로 기사에 더하여, 「읽을거리 천황기」나 「황기는 이천육백 년인가, 천육백 년인가?」와 같이 천황제 신화를 탈구축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이에 더해 「팔로군의 정체를 밝힌다」나 「직접 본 도사카 준(戸坂潤) 씨의 옥사」와 같은 기사로 좌익 입장에서 중요한 역사적 사례들을 재조명했다.⁵⁰ 1946년 9월에 발행한 1권 5호의 표지는 세 가지 기사 제목을 볼드체 글상자 안에 넣어 강조했는데, 창간 초기에 『진상』이 역사 다시 쓰기에서 어떤 내용에 중점을 뒀는지 잘 보여 준다. 「황제 푸이(溥儀)는 무엇을 했는가」, 「읽을거리 천황기: 쇼토쿠 천황(稱徳天皇) 음탕전(淫蕩伝)」, 「대역사건을 말한다」가 그것이다. 전쟁의 진상 폭로, 천황제 신화 탈구축, 그리고 좌익 역사 재조명이 창간 초기에 『진상』이 역점을 둔 과제들이었던 것이다.

50 사와 게이타로와 마찬가지로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 좌익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투옥당한 경험이 있었던 역사가와 활동가의 참여가 눈에 띈다. 네즈 마사시(瀬津正志, 1908~1986)는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로, 인민전선사건으로 1937년 검거되었다가 1939년 출옥과 동시에 정병당한 경험이 있다. 전후에 천황제 연구에 전작했고, 창간호 첫 기사인 「황기는 이천육백 년인가, 천육백 년인가?」를 집필했다. 「팔로군의 정체를 밝힌다」를 집필한 니시자토 다쓰오(西里龍夫, 1907~1987)는 중국에서 반일반전 운동에 참여한 경력이 있고, 일본공산당 지하활동으로 한 차례 투옥된 후 1933년 상해로 건너가 중국공산당에 입당했다. 1942년에 체포되어 1945년 7월에 사형 구형까지 받았으나, 패전으로 같은 해 10월에 석방되었다.

이처럼 전후 일본에서 전쟁 중에 은폐되었던 진상을 폭로하여 전쟁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겠다는 명분 아래 전개된 역사 다시 쓰기는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의 산물이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일본 미디어 또한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만들어 낸 합작품이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다만 수동적인 수용자로 존재했던 것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음 장에서는 『진상』의 역사 다시 쓰기에 독자들 또한 동참했던 정황을 밝히고, 이들이 새로운 역사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진상』이 활용한 객관적인 역사에 관한 통념이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고찰해 볼 것이다.

4. 폭로 주체로서의 독자와 알리바이로서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실 은폐의 수사와 폭로로 진실에 도달한다는 전략에 기댄 전후 역사 다시 쓰기 과정에서 미디어 오디언스는 일방적인 교육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로 표상되었다. 미군정의 전쟁 유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진상 상자〉가 라디오 청취자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쌍방향 소통의 형식을 취한 것처럼,⁵¹ 『진상』 또한 몇 가지 수행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독자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진실 찾기 욕망을 가진 주도적인 개인이자, 폭로에 동참하는 주체로서 독자를 호명한 것이다.

우선 창간호부터 「민중의 목소리」(民衆の聲)란(欄)을 갖춰, 두 페이지에 걸쳐 4단 중 1단 분량의 지면을 할애했다.⁵² 그리고 진상을 밝혀야 할 ‘과제’와 투고를 모집하는 기사를 창간호부터 대대적으로 실었다. 주관적인 것으로 이해될 ‘의견’과 ‘사실’을 대비시켜, 독자들의 참여의 의미를 객관적인 ‘사실’만을 말하는 행위로 설명한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51 정지희,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 전후와 포스트 전후 일본의 ‘태평양 전쟁’사 다시 쓰기와 진실의 정치」, 197~199쪽.

52 「民衆の聲」, 『真相』創刊号, 1946, 6~7쪽. 필자는 스스로 빈농이라고 소개한 야마구치 다카미(山口隆巳)로 표기되어 있다.

그 진상을 발표하라! 과제와 투고 모집

지금까지 눈도 귀도 입도 막혀 있었던 인민 제군에게는 그 사건의 진상은 어떤 것일까? 그 일의 뒷이야기를 반드시 듣고 싶다, 하는 것이 분명히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런 크고 작은 의문을 기탄없이 질문하고 주문해 주십시오. 또한 인민 대중에게 호소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빠짐없이 알려 주십시오. 다만, 의견(議論)은 사절하고, 사실에 한합니다. 게재분에는 소소한 사례를 드립니다.⁵³

2호부터는 위의 내용은 ‘과제 모집’으로 새로 분류되고, “사실은(本当は) 이렇다! 지금까지 왜곡되어 있었던 사건의 진상, 혹은 실제로 잘못 전해지고 있는 일의 진상 등은 꼭 대중 앞에 밝혀야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목격자」란을 위해 자진하여 응모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의 투고 모집이 추가되었다.⁵⁴ 즉 진상을 알고 싶은 사항에 대해 질문하거나 『진상』에서 다뤄 주기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숨겨진 진상의 ‘목격자’로서 독자에게 직접 사실을 폭로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실제로 「목격자」란은 2호부터 개설되었다. 요코하마의 모리이치(森一)라고 스스로를 밝힌 독자의 투고로, 천황 인간선언에 뒤따른 순행에서 천황이 전쟁 책임이나 일본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초래한 데 대한 책임을 단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음을 고발하는 내용이다.⁵⁵

1권 3호 「편집후기」에 따르면, 3개월 만인 1946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제 모집에 응하여 들어온 ‘요청’[注文]은 수십 통이었다. 가장 많은 수를 점한 폭로 요청 대상은 만주사변부터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쟁에 관한 것이었다. 특히 ‘태평양전쟁’의 전 기간을 통해 연합군 함대의 동향과 관련한 진상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 편집부는 “이것으로 지배계급이 전쟁을 강행하기 위해 얼마나 국민 대중을 속였는지 알 수 있다.”라는 논평을 추가하여, ‘지배계급’과 대중독자 사이에 선을 긋고 전자에 의한

53 「あの真相を発表しろ!：課題及び原稿募集」, 『真相』創刊号, 1946, 4쪽. 강조는 인용자.

54 「ほんとうはこうだ!：原稿募集」, 『真相』2号, 1946, 12쪽.

55 森一, 「目撃者：天皇の選挙運動」, 『真相』2号, 1946, 18쪽. 이름은 기재되지 않았다.

후자의 기만에 초점을 맞추기를 독려했다.⁵⁶ 그러나 이 집계 결과는 독자들의 관심이 결국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경위와 원인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을 드러낸다. 즉, 독자들은 주로 패전에 대한 회한과 패전의 책임 소재에 대한 관심에서 『진상』의 호명에 응하고, 전후 역사 다시 쓰기 과정에 참여했던 것이다.

여기서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 점은 폭로 잡지로서 『진상』이 표방한 사실의 폭로라는 전략이, 독자들이 당시의 역사 인식 교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이다. 사와 게이타로는 “이론도 평론도 일체 없이,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폭로 잡지’ 『진상』의 ‘편집방침’이었다고 밝혔다.⁵⁷ 이 방침은 앞서 소개한 「창간사」에서도 언급했는데, 1권 4호에 실린 「『진상』의 사명에 대하여」라는 제명을 단 글에서도 거듭 천명했다. “8월 15일까지는 진실은 눈곱만큼도 알지 못했던(知らされなかった) 수많은 동료들에게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진실을 이야기해, 일본의 반동정치가의 음모나 책동, 부정행위의 일체를, 적나라하게 알리려는 잡지”이자, 이것을 “이론이 아니라, 사실을 통해 알리려는 잡지”라는 것이다.⁵⁸

1권 5호 말미에 실린 무기명의 사진 기사는 위의 방침에 따른 『진상』의 폭로 전략을 전형적으로 보여 준다. 전쟁 당시 선전되었던 내용과, 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상』 편집진이 새로이 가져온 내용을 시각 이미지와 더불어 나란히 놓는 방식으로 전시의 허위와 전후에 밝혀진 사실을 명징하게 대비시키는 것이다(그림 1).

“이 사진을 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1944년 11월에 개봉된 〈일본뉴스〉(日本ニュース) 232호의 버마해전(ビルマ沖海戦, 1944년 10월 24일)의 장면이다. 그 설명에

56 『編集後記』, 『真相』 1권 3호, 1946, 33쪽. 이외에는 2·26 사건, 노몬한사건, 난징대학살 등 만주사변 이후 전쟁의 전개에 관한 질문이 다수를 점하고, 대역사건과 같은 좌익 탄압 사례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한다.

57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295쪽.

58 「『真相』の使命について」, 『真相』 1권 4호, 1946, 4쪽.



(그림 1) 『진상』 1권 5호 무기명 사진 기사

이르길 우리 공격기는 적을 섬멸한 후에 연료부족으로 착함하지 못하고 모함 옆에 착수했다 운운.” 그러나 그 진상은 오히려 같이 우리 항모[소류(蒼龍)?]는 미공군의 맹습으로 큰 화재 후 이미 침몰한 것이다. 이것이 자칭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다는 ‘대본영 발표’의 정체다.⁵⁹

은폐된 사실을 드러내어 역사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다는 믿음은, 단 하나의 움직일 수 없는 역사적 진실에 적응하는 유일무이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이 사실이 실증을 통해 온전히 재현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성립한다. 『진상』은 이러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역사에 대한 독자들의 통념을 꾸준히 환기하는 방식으로, 독자들이 스스로를 ‘기만당한 대중’으로, 이 전까지의 역사 이해를 ‘허위’로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을 매개했다.

“사실은 스스로 말한다”는 실증주의의 주문(呪文) 아래에서, 단 하나의

59 『真相』 1권 5호, 1946, 35쪽. 괄호와 물음표는 원문 그대로임. 위의 사진 기사에서 언급한 항모 소류는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미 침몰했다. 이러한 사례는 진실의 담지자로 스스로를 표상했던 『진상』 편집진 또한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반드시 철저하지는 않았던 점을 시사한다. 기사에서 ‘진상’으로 제시한 정보나 사진의 출처도 언급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올바른 사실의 이름으로 사실의 ‘교정’이 이루어질 때, 이에 따른 역사관의 수정은 자연스럽고도 필연적인 귀결로 간주될 수 있다. ‘객관적인’ 사실을 늘어놓는 행위야말로 역사적 진실에 이르는 길이라는 믿음은 특정한 과거를 불러들여 역사적 사실로 생산하는 바로 지금(now)이라는 수행적인 역사적 현재의 중층적인 시간성을 지우고,⁶⁰ 역사를 서술하는 주체의 개입과 이를 둘러싼 권력관계 모두를 없는 것으로 치부하게 만든다. 따라서 역사관의 교체 또한 사실 교정과 같은 일차원적인 행위로 환원시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실 폭로 전략의 효과는 『진상』이 제공하는 사실이 진실함을 독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다. 『진상』은 대중잡지였기 때문에, 참고자료와 같이 사실 여부를 확인할 근거가 기사 안에서 주어지는 일은 많지 않았다. 매호 다양한 필자의 글을 실었으므로 글쓰기 방식에 일관성을 기대하기도 어려웠다. 역사학자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나 저명한 저널리스트의 경우, 명성을 봐서 이들이 제공하는 사실의 권위를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더라도, 이들이 제공하는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익명 기사도 많았고, 사와 게이트로와 같은 편집진도 필명으로 기고하는 일이 잦았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이 점을 독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중요한 문제다.

우선 전후 지식 담론 공간에서 공산당이 누렸던 특별한 권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산당은 패전으로 끝난 전쟁에 일관되게 반대한 거의 유일한 정치세력이었고, 몇몇 간부의 영웅적인 옥중 비전향의 이미지가 더해져 널리 경의의 대상이 되었다. 사회와 역사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에 협력하거나 전쟁을 막지 못했다는 회한이 만연한 전후 초의 분위기에서, 공산당만은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냉철하

60 역사적 현재의 수행성과 중층적 시간성으로서의 ‘지금’에 관한 논의는 Harry Harootunian, *History's Disquiet: Modernity, Cultural Practice, and the Question of Everyda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0(한국어판은 해리 하르투니언,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근대성, 문화 그리고 일상생활』, 휴머니스트, 2006), p. 70.

게 미래를 예측한 것으로 흔히 받아들여졌다. 이런 특정한 맥락에서 공산당은 ‘일본의 용기와 양심, 과학과 진리의 상징’으로서 전후 약 10년 간 일본의 지식장에서 거의 절대적인 헤게모니를 누렸다.⁶¹ 『진상』 편집진은 『진상』을 공산당 기관지로 선전하지 않았지만, 미군정은 물론이고 독자 일반이 『진상』을 공산당 계열의 잡지로 인식하고 있었다. 『진상』에서 올바른 사실로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일단 상당수의 독자들 사이에서 진실로서 통용될 수 있는 시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가장 충실하게 전거를 제시한 기사가 오히려 독자들로부터 진실성을 가장 많이 의심 받았다는 역설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보게 한다. 논란이 된 것은 『진상』의 인기 연재물인 「읽을거리 천황기」였다. 독자들 가운데 이 연재물은 꾸며낸 것이라 주장하는 이들이 연재 중단을 요구하는 투서와 ‘협박조의 편지’를 보내는 사례가 속출하자, 1권 5호 「편집후기」에 다음 호 지면을 빌어 필자가 직접 이에 답할 계획임을 알리고,⁶² 1권 6호에 필자인 아키즈키 슌이치로(秋月俊一郎)가 실제로 응한 것이다. 그는 “「읽을거리 천황기」의 기사가 날조된 것이거나, 사실무근의 악선전이라면, 기꺼이 비난을 받을 것이고 매도당해도 좋지만, 나는 마음대로 공상하거나 상상하여 이 문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모두 예로부터 권위를 인정받고 발매도 금지되지 않고 적용되어 온, 소위 널리 공인(天下御免)된 자료에 근거하여 「천황기」를 작성하고 있다.”라고 해명하고, 본인이 자주 인용하는 역사서를 열거했다. 그는 일부러 『고사기』(古事記), 『일본서기』(日本書紀)와 같이 천황을 우러러보는 이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텍스트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역대 천황의 악행이나 비행을 찾아내는 방식을 택했음을 밝히고 있다.⁶³ 실제로 아키즈키는 첫 회부터 꾸준히

61 전후 담론공간에서 공산당이 지녔던 권위에 대해서는 오구마 에이지, 조성은 옮김, 『민주와 애국: 전후 일본의 내셔널리즘과 공공성』, 223쪽, 227~231쪽을 참조했다. 인용어구 출처는 230쪽.

62 「編集後記」, 『真相』 1권 5호, 1946, 35쪽.

63 秋月俊一郎, 「よみもの『天皇紀』について」, 『真相』 1권 6호, 1946, 31~34쪽. 아키즈키 슌이치로는 2·26 사건 당시 주간 『시국신문』(時局新聞) 편집장을 지낸 바 있다.

별개의 단락으로 처리하여 직접 인용문을 제시하고, 일일이 전거를 다는 서술방식을 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키즈키의 기사에 날조된 것이라는 의혹이 집중되었던 점은, 사실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표식인 외부의 전거가 온전히 주어졌다는 이유로 특정한 사실이 진실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님을 방증한다. 결국은 독자의 주관적인 판단, 즉 관점에 기댄 선택이 개입하는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본다면, 글 안에서 사실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은 기사들이 널리 읽히고, 『진상』의 인기가 시사하듯 많은 독자들 사이에서 신빙성을 인정받았던 것 또한 은폐와 폭로라는 수사에 기댄, 『진상』의 진리 주장(truth claim)을 선험적으로 받아들였던 독자의 선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절대적인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몰라서 진실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닐 수 있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믿는 것으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이다.⁶⁴

즉, 사실 폭로를 통해 진실의 담지자로 자임하면서, 미군정과 『진상』 편집진이 역사 인식을 바꾸려는 그들의 의도에 대한 알리바이로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통념을 활용했다면, 오디언스의 수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방식의 전유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은폐와 폭로의 수사에 힘입어 객관적인 것으로 상상된 역사적 ‘사실’은 전쟁 당시의 지배적인 역사 이해를 맹종했던 것뿐 아니라 전후에 새로운 역사 이해를 발 빠르게 받아들인 데 대한 일종의 알리바이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와는 『진상』이 인기를 모았던 ‘비결’로 ‘실화 읽을거리’ 형태를 취해, “이론도 평론도 일체 없이, 사실만을 전달한다는 편집방침을 채택했던 점”을 꼽았다.⁶⁵ 사실 위주의 편집방침이 이해하기 쉬운 서술 방식이었기 때문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64 전후 일본에서 천황제의 존속을 묵인하는 일본인들의 행동을 두고, “몰라서 그렇게 하는”(they do not know it and do it)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하는”(even though they know it, they still do it) 것으로 접근하기를 촉구하는 해리 하루투니언의 분석틀과 통찰을 빌려 표현한 것이다. Harry Harootunian, “Review Article: Hirohito Redux,” *Critical Asian Studies* 33(4), 2001, p. 610.

65 佐和慶太郎, 「証言 7 『人民』と『真相』の周辺: 戦後革命と人民社」, 295쪽.

5. 맺음말: 은폐와 폭로의 수사와 냉전·탈냉전기의 역사서술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진상』의 사례는 전후 일본의 지배적인 역사 인식의 형성이 미군정뿐 아니라 일본의 미디어와 오디언스에 의한 미일합작의 결과물이었던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또한 은폐와 폭로의 수사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통념이 역사관의 교체가 자연스럽고 필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전후 역사 다시 쓰기에 미군정뿐 아니라 일본의 미디어와 오디언스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한 정황과, 은폐와 폭로의 수사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통념이 역사관의 교체를 매개했던 사정을 시야에 넣으면, 전후 역사관의 형성을 일방적인 ‘세뇌’의 문제로 다룰 수는 없다.

이 글이 초점을 맞춘, 역코스 이전의 시기에는 미군정과 일본의 좌파 미디어 사이에 냉전적인 충돌보다는 협력관계가 뚜렷했고, 일종의 좌우합작을 통해 전시와의 단절을 전제로 하는 역사관을 형성하고 유포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졌다. 이후 미군정과 일본의 좌파 미디어는 각자의 이념에 따라 노선을 달리하지만, 양쪽이 함께 동원했던 ‘객관적’인 역사에 대한 통념과, 사실의 은폐와 폭로로 역사적 진실의 문제를 이해하는 사고는 전후의 지배적인 역사 인식의 근간을 이루었다. 이 점이 함의하는 바를 냉전·탈냉전과, 전후와 탈전후의 역사서술 문제에 비추어 몇 가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려 한다.⁶⁶

우선, 은폐와 폭로에 근거를 둔 단절적인 역사 인식의 형성과, 이러한 인식이 전후 내내 크게 도전받지 않고 유지된 사정을 냉전이라는 매개 변수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냉전은 역사적인 진실을 인식 외부에 존재하는 절대적인 진리로 다루는 사고방식이 받아들여지기 쉬운 토양을 형성했다. 전시를 거치면서 굳어졌던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에 대한 통념이

66 이 글에서는 특집의 취지에 맞게 냉전·탈냉전과, 전후와 탈전후의 역사서술에 초점을 맞추고, 익명의 심사자 선생님께서 제안해 주신 ‘실증사학과 미디어의 “진상”이 가지는 의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삼아 새롭게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냉전의 격화와 함께 의심해서는 안 되는 ‘상식’이 되어 갔기 때문이다.

피터 노빅(Peter Novick)의 분석에 따르면,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역사 학계에서 역사학에 적용된 객관성(objectivity) 개념의 정합성에 대한 회의가 제기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와 같은 회의론이 미국을 분열시키는 폐단으로 공박당한 바 있다. 그리고 냉전에 이르러 객관성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과 초연함(detachment)이야말로 자유주의 진영을 전체주의 체제와 구분 짓는 본질적인 특징인 것으로 긍정되었다. 주관적인 역사 이론과 정치적인 목적에 학문을 복무시키고, 객관적인 역사의 진실을 경시하는 체제로 전체주의를 규정하고, 전쟁 중에는 파시스트 추축국을, 전후에는 공산진영을 비난하는 수사로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역사의 통념을 동원했던 것이다.⁶⁷ 미군정이 전시 일본의 지도자들에 대해 사실을 은폐하고 대중을 기만한 파시스트로 규정한 것 또한 이러한 시대정신에 비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은 개별 사실의 기저에서 작동하는 사회 진보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자본주의를 극복하여 사회 변혁을 이룬다는 목적성을 감추려 들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 구조를 분석하여 변혁의 역사적인 경로를 제시하려면 과학적인 인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당위를 전제로 삼았으며, 이에 따라 인식의 객관성과 엄밀한 실증성을 중시한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⁶⁸

이런 의미에서 통전기(通戰期) 일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의 객관적인 역사에 대한 인식이 미국 사학자들의 그것과 유사한 궤적을 그렸던 점은 눈길을 끈다. 몇몇 통찰력 있는 연구에서 조명했듯, 전간기와 전쟁 초기에 일본 마르크스주의자들 사이에서도 역사를 서술하는 ‘현재’에 착목하여 역사적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재현 가능하다는 통념을 회의하는 사조가 대두했다. 그러나 주류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이를 ‘관념론’으로 싸잡아

67 Peter Novick, *That Noble Dream: The "Objectivity Question" and the American Historical Profession*,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pp. 133~319.

68 이 점에 관해서는 나가하라 게이지, 하종문 옮김, 『20세기 일본의 역사학』, 103~104쪽을 참조했다.

비난한 탓에 역사적 객관성 개념을 탈구축할 계기로 작용하지는 못했다.⁶⁹ 이소마에 준이치(磯前順一)는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이 천황제 이데올로기가 ‘허위의식’임을 보이기 위해, 천황제를 역사화(historicize)하여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던 권위를 상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인식과 지식 생산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천황제를 ‘실체화’하는 한계를 보인 것으로 설명한다. 그리고 전후에도 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안정된 역사서술 방식으로서, 절대적인 진리를 실체화하는 방식에 계속 의존했다는 것이다.⁷⁰

이처럼 냉전은 객관성과, 실체로서의 진리를 역사적 진실에 직결시키는 사고방식을 정착시켜, 전후 일본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현재에 대한 성찰적인 사유를 제약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약이 느슨해진 탈냉전기에 오히려 성찰적인 사유와 거리가 먼 역사수정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이러한 현실을 단순히 언어적 전회나 포스트 진실(post truth)의 세대 탓에 과학적 사고와 이성이 경시되는 새로운 현상으로만 치부해서는 문제의 전체상이 보이지 않는다. 대중 공론장에서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미군정 시기 역사 서술을 공격할 때 주요 수단으로 삼는 것은 여전히 객관적인 ‘사실’의 은폐라는 수사와 실증을 통한 진상 폭로라는 전략이기 때문이다.⁷¹

반대로 역사수정주의자들의 사실 교체 시도와 진리 주장을 다만 자기 성찰을 요구했던 전후 민주주의의 규제력이 약해짐에 따라 전시를 연상시키는 반지성주의가 대두되는 징후로 비난하는 데 그쳐도 문제의 소재가 보이지 않게 된다. 이 글에서 조명한 것처럼, 전후 일본의 역사 다시 쓰기 또

69 Harry Harootunian, *Overcome by Modernity: History, Culture, and Community in Interwar Japa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pp. 370~378; 하리·할트우너니안, 「歴史のアレゴリー化: マルクス主義, 羽仁五郎, そして現代からの要請」, 磯前順一·하리·D·할트우너니안 編, 『マルクス主義という経験: 1930~40年代日本の歴史学』, 青木書店, 2008, 227~260쪽.

70 磯前順一, 「戦後歴史学の起源とその忘却: 歴史のポイエーシ스를めぐって」, 磯前順一·하리·D·할트우너니안 編, 『マルクス主義という経験: 1930~40年代日本の歴史学』, 30~44쪽.

71 정지희, 「사실로서의 역사와 역사적 진실: 전후와 포스트 전후 일본의 ‘태평양 전쟁’사 다시 쓰기와 진실의 정치」, 203~207쪽.

한 객관적인 ‘사실’의 이름으로 진리를 절대화하여 역사적 진실을 단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고방식이 일종의 반지성주의의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냉전 하에 지배적이었던 일본의 역사 인식 또한 반지성주의에 힘입어 형성되고 유지된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수정주의자들이 여전히 같은 통념과 전략을 유용하는 것은 이것들이 역사 인식의 교체를 꾀하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점령기의 역사 다시 쓰기가 입증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조금 더 유효한 접근은 전후에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어떤 맥락에서 절대화했는지, 그 구체상을 추적하고, 이러한 경향이 역사 서술에 개입하는 주체의 관점과 선택, 그리고 이를 둘러싼 권력관계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게 하는 알리바이로 기능할 위험을 늘리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탈냉전 시대 역사학이 할 일은 이들의 존재를 역사적 진실에 도달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가로막거나 교란하는 외부의 변수로 취급할 게 아니라 역사 서술에 언제나 개입하는 내재적인 상수로 고려한 위에, 어떻게 더 진실성 있는(truthful) 역사를 생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작업일 것이다.⁷²

72 역사적 진실에 대한 통념과 역사적 진실성 사이의 의미 있는 구분을 다룬 유용한 논의로는 Tessa Morris-Suzuki, “Towards a Political Economy of Historical Truthfulness,” *The Past Within Us: Media, Memory, History*, New York: Verso, 2005, pp. 229~244 참조.